

# 野 “尹 정부, 日 오염수 방류 침묵으로 용인”

이재명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  
이정미 “국제 여론 만들어 압박”  
박진 “日, 시운전 사전통보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시운전에 들어간 데 대해 “윤석열 정부만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는 “오염수 핵폐기물을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1ℓ 씩 매일 마셔도 괜찮

다는 괴담을 퍼뜨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국민의 주장을 오히려 괴담이라고 덮어씌우는 행태에 국민들과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윤 정권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검증 절차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은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

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합의 정신에 맞춰 속도감 있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장인 위성근 의원은 성명에서 “주권국가의 정부답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법적 조치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후쿠시

마 오염수 국회 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국민청문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태평양 작은 섬나라 외교관들도 당당히 반대하는데 어째서 대한민국 대통령만 한마디도 못 한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방류는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 석촌호수 수준의 보관 수조를 건설하거나 탱크를 더 설치해서 지하에 보관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들이 분명 존재한다”며 “정부가 일본에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 여론을 만들어 압박하면 충분히 방향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오늘 일본이 기습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사전통보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또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세슘 우려도 나오고 있어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결정할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박진 장관은 “사전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도은 대변인이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관련 시행령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에 여성으로 특



정한 이유’에 대해 “윤 정부는 출범 후 정치,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 문제(‘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기의 피고인 신원공개)는 국민들 관심이 많은데도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는게 적합한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를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관석(오른쪽),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실시된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먼저 투표를 마친 윤 의원이 이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

## 민주 “상임위원장, 전·현직 당직·고위 정무직 배제”

정청래 “선당후사”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 뒤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전·현직 당직과 고위 정무직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원장 자리를 요구해 온 정청래 최고위원은 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안을 추진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선수와 연구모임 등 다양한 모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거나 종전 원내대표를 맡은 분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

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회 관례로 이어져 온 것인데 기존 관례 취지는 2개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되면 하나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분산과 균형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이 원칙을 반영하고 선수와 나이, 지역 특성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구체적 인선은 추후에 정하고 14일 정도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위원장 내정자였던 정 최고위원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 최고위원은 “박광은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추인 후 곧바로 나가서 ‘또 선당후사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양향자 “신당 창당”... 26일 서울서 창당 발기인 대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내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제3시대’ 정당에 힘을 받는지 주목된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사진)은 12일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창업진흥회 KBIZ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당 지향점이나 함께 할 인물 등은 논의 중이다.

양 의원은 “기존 정치 문법과 기존 정치권에서 완전히 익숙한 것과의 결별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임원(상무) 자리까지 오른 반도체 전문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광주에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2021년 보좌진 성비위 의혹 등으로 자진 탈당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당시, 민주당과 갈라선 뒤 복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찬 139·반 145명·기권 9명  
국힘 “국민 안중에도 없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민주당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동정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감안하더라도, 14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혹은 기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안팎에선 ‘방탄정당’ 이미지 고착화와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가결 표를 던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

려졌지만, 반대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뜻과 달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언제까지 방탄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하던 이재명 대표의 말 역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라며 “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을 꽂은 민주당, 혁신의 ‘핵’ 자도 꺼내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학교폭력 학생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보호시

설을 운영하고,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 및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감이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가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피해 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을 종합 지원하는 조력인 제도 신설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학급교체 △학교폭력업무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교원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법안은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사이버폭력을 처음으로 정의에 포함시켰다는 점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